

재발방지 北 변화 감지… 개성공단 불씨 살리기

■ 北 7차회담 14일 개최 제안에 정부 수용

경협보험금 지급에 대응… 책임전가 수순밟기 지적도

북한이 7일 오후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간 7차 실무회담을 14일 열자고 전격 제안함에 따라 꺼져가는 개성공단사업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단 북한의 이번 회담 제의는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경협보험금 지급을 결정한데 대한 대응조치로 풀이된다.

시점상 일부가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을 발표한 뒤 한 시간만에 나왔다는 점에서 북한의 이번 제안은 우리 정부의 '중대결단' 실행에 대비해 준비한 조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금 지급이 사실상 중대결단의 하나로 개성공단 폐쇄 수순밟기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정말 공단 폐쇄의지가 있는지를 자처보던 북한이 서둘러 대응 카드를 던졌다.

다른 분석이 나온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은 특별 담당에서 회담을 제안하며 ▲개성공단 잠정종단 조치의 해제 및 출입 전면허용 ▲북측 근로자의 정상출근 보장 ▲남측 인원의 신변안전 담보 및 재산 보호 등 사실상 공단 재가동을 염두에 둔 조치를 밝혔다. 일단 북측이 제안한 선

(先) 조치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북측이 키 리졸브 한미합동군사연습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취했던 출입제한조치와 근로자 철수조치를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조치를 취했기 때문이다.

개성공단 사태 해결을 위한 핵심쟁점인 재발방지와 관련해서도 북한의 변화가 감지된다. 조평통 대변인은 특별답변문에서 "북과 남은 공

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았을 때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도록 한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열린 6차 실무회담 때 제시한 합의서 수정안에서는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았을 때 공업지구의 정상운영을 보장하되 그에 제재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 담화에서는 "그에 제재되는 일을 일체 하지 않기로 하였다"라는 대목을 빠진 눈길을 끈다.

북한은 종전까지는 남측에서 벌어지는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김정은의 달려박스' 등의 자극적인 언론보도를 거론하며 이 대목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져 나름 변화를 감지케 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이 재발방지에서 변화를 보였기보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책임전가를 위한 수순밟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개성공단 주요 일정

2013.3.27	北, 개성공단 입출경 체계별로 사용편 낭비간 군 통신선 차단
3.30	北, 중앙복구개발단도 축총, 종전 폐쇄 발표
4.3	北, 개성공단 평행제한, 남측으로의 귀환만 허용
4.9	北측 근로자 출근 안해 사실상 가동 중단
4.14	北, 조국평화통일위원회, 南, 대화 제의 거부
4.17	北, 개성공단 사태 해결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 개최 제의
4.25	정부, 개성공단 평행제한 폐쇄로 개회 제의
4.26	북한, 개성공단 남북실무회담 개최 거부, 정부, 개성공단 전면화면수 결정
4.27	개성공단 폐쇄인정 첫 12명 귀환,
5.3	한반도 남부 있던 미적역 인력 7명 전원 귀환, 개성공단 평정폐지
7.4	정부, 개성공단 실무회담 판문점 개최 제의
7.6	북한, 개성공단 실무회담 6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 개최 합의
7.6~7	개성공단 1차 실무회담, 개성공단 대체통용에 원칙적 합의
7.10	개성공단 2차 실무회담, 북한, 이기구 상황 및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제의, 정부, 이기구 회담원 수용
7.11	북한, 이기구 총통 금강산관광 재개 실무회담 보류 입장 발표
7.12	정부, 개성공단 평정화면수 속수대로 서호 → 김포옹으로 교체
7.13	개성공단 3차 실무회담
7.17	개성공단 4차 실무회담
7.22	개성공단 5차 실무회담
7.25	개성공단 6차 실무회담, 결렬
8.7	북한, 14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7차 실무회담 개최 제안, 정부, 북 제안 수용(14일 남북 개성공단 7차회담 예정)

/연합뉴스



대인예술시장 작가들의 '다다' 회원들이 7일 오후 5시 대인예술시장 내 '갤러리 다다'에서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대인시장 작가들도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

불법 대선개입 진상 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광주 대인예술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국가정보원의 대통령 선거 개입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인예술시장 작가회의 '다다'(회장 이기성) 소속 회원 등 작가 30여명은 7일 오후 5시 시장 내 '갤러리 다다'에서 발표한 '한국민주주의에 조종이 몰렸습니다' 제목의 성명서에서 "정부는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작가들은 "국정원이 지난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를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네심'과 민심을 호도했다"며 "그런데도 경찰은 허위발표를 통해 국정원에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이어 "새누리당은 자의적으로 짜

깁기한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불법 유출공개해 국정원 대선개입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이를 대肆특필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다시 인용해 논란을 확대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중해야 할 국정원이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와 NLL 용인 발언 등 또 다른 위법행위로 보호막을 치고 있다"며 "마땅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정보기관의 수장이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공작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작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에 '셀프 개혁'을 주문하고, 1992년 대선 당시 지역감정을 충동질한 김기춘 전 법무장관을 대통령비서실장에 임명했다"며 "박근혜 정부가 민심을 해아리고 국정원의 불법대선개입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국정원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작가들은 시국선언문 발표에 이어 '갤러리 다다'를 훈전으로 뒤덮은 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책임자처벌' 등의 글을 적는 행위극을 선보였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설·추석·어린이날

대체휴일제 '가닥'

설·추석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과 겹치면 공공부문에 대체휴일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새누리당, 청와대는 6일 오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비공개로 실무급 당·정·청 회동을 하고 이런 내용의 대체휴일제 도입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청은 민간기업에도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법률 제·개정보다는 대통령령인 '공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고쳐 공공부문부터 우선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당정청은 일단 설·추석 연휴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제를 도입하되 어린이날의 적용 여부는 당·정·청의 등을 거쳐 구체적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설·추석 연휴는 공휴일과 겹칠 때만 대체공휴일을 도입한다면 향후 10년간 9일, 연평균 0.91일씩 공휴일이 증가한다. 여기에 어린이날까지 추가되면 향후 10년간 11일, 연평균 1.1일씩 공휴일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지자체 대규모 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정부 지정 전담기관이 맡는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는 정부가 지정한 전담기관이 맡게 된다. 또 지자체의 부채관리가 강화되고 보조금 지원 내역에 대

'공투자관리센터'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지자체는 임의로 선정한 기관에서 조사를 수행해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주민이 지방 재정상황

을 자세히 알 수 있도록 공시항목을 ▲투자사업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각종 행사 원가정보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경영정보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부채관리 범위를 지자체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부채(통합부채)와 우발부채(BTL, 보증 등)까지 확대해 재정위험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부채관리를 강화했다.

아울러 자치단체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수급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와 벌칙 신설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

유가족·해군장교들 "사실 왜곡, 숨진 장병 명예 훼손"

천안함 유가족과 해군 장교 등 5명이 7일 오전 11시 50분 의정부 지법 고양지원에 천안함 폭침 사건의 의혹을 딴 다큐멘터리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는 또 "사실을 왜곡한 영화가 그대로 상영되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숨진 46명의 장병과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원이 신청인의 입장을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러진 화살', '남영동 1985' 등을 만든 정지영 감독이 기획·제작한 '천안함 프로젝트'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 사건과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75분 분량으로 담고 있다.

이 영화는 지난 4월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처음 공개됐으며 다음 달 초 일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영화 개봉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법적 공방으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재현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부실채권(NPL) 매각

광산구 우산동 웨딩홀 대지권 1345 m² 건물 2974 m²

감정가격 78억4천만원

채권매각 24억원

화순도곡 무인텔

대지 3198 m² 건물 1107 m²

감정가격 41억9천만원

채권매각 23억

회정동 예식장

대지 1094 m² 건물 4489 m²

감정가격 41억5천만원

채권매각 20억원

부실채권 매각은 현재 경매진행중이거나 정지중인 물건을 유동화 자산매각 전문회사인 에셋코리아를 통해 선착순 수의제 약으로 채권을 매입하는 유용한 대체법입니다.

상담 010-7570-7525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714-73 [2층]
(법원 앞에서 70m 범호사회관 옆 건물) 또는 (지산 주유소에서 법원 쪽으로 20m)

선암동 전원 주택용지 분양

자연과 함께 하는 어등산 빌리지

광산구 선암동 414-17번지 일원

분양면적 7008 m²(11가구)

분양가격 전용면적 평당 130만원

각 필지 면적 약 90평~280평(분할·합병 가능)

현 토목공사 80%진행중

단지설명 자연속 힐링 주거단지

- 1. 분양면적은 전체가 쓸 수 있는 전용면적입니다.
- 2. 각 필지별 상·하수도관련 연결공사 완료
- 3. 각 필지별 건축허가 완료(각종세금 납부완료)
- 4. 각 필지별 6m로 도로 접

찾아오는길

선운지구



도심속 친환경 명품주거 타운

선운공인중개사 010-5166-0013
010-2475-0933

부동산 전문지 굿부동산저널 창간!

시시종합월간 굿뉴스피플이 발행하는 굿부동산저널은 전국 부동산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에게 매호 10,000부씩 무가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보의 모든 것!

대한민국 명품 부동산 월간지

굿부동산저널에서 만나보십시오.

지사 모집

굿부